

주간농업·농촌동향	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2010.04.26 미래정책연구실

※ 4.21일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「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」 내용임.

□ 최근 지역 경제 동향 및 과제

-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는 지난해 1분기 바닥을 지나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
 - 지방경기종합지수('05=100) : ('08.12) 89.5 → ('09.1) 89 → (6) 97.1 → (12) 99.9
- 지방의 수출·생산 등 실물경제 지표들은 작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, 지역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호전
 - 지방 수출증가율(%) : ('09.1분기) △25.5 → (2분기) △21.4 → (3분기) △19.6 → (4분기) 9.8 → ('10.1-2월) 26.7
 - 지방 제조업생산증가율(%) : ('09.1분기) △16.1 → (2분기) △6.5 → (3분기) 5.0 → (4분기) 17.5
 - 지방 설비투자 BI : ('08.4분기 89 → ('09.1분기) 84 → (2분기 92 → (3분기) 97 → (4분기) 99 → ('10.1분기) 101
- 이번 대책은 그간 지역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 보다 능동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, 지역경제 회복 국면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특화된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

<주요 정책 및 세부추진과제>

주요 정책과제	세부 추진과제
지방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	○ 지방이전·고용보조금 예산 규모 확충 ○ 기존 수도권이전기업, 지방소재신규투자기업 이외에 지방공장신설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
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	○ 선도산업에 대한 금융·입지·외국인투자 등 지원체계 강화 ○ 선도산업 장기인턴십 도입 및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강화 ○ 선도산업 R&D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조기 사업화

주요 정책과제	세부 추진과제
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	○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○ 신재생에너지 투자·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 확대 등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 ○ 매년 입지만족도 조사·입지패턴변화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입지서비스 제공
시·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	○ 1단계: 지역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○ 2단계: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시도가 특화 발전 주도
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	○ 대덕특구의 국가 R&D허브 기능 강화 ○ 연내 광주·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

□ 과제 1 :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

- 그간 과밀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 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의 고용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.

<기업이전 및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금 현황>

구분	지원금액	지원기업	지원효과
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('04~'09)	2,209억원	247개	5.7조원 투자유치, 1.8만여개 고용창출
지방소재 신규투자기업 고용보조금('08~'09)	540억원	2,068개	1만여개 고용창출

- 하지만 보조금 규모가 현재 기업의 투자수요에 크게 부족하고,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치중하여 지방의 신규투자를 확충하는 데 미흡함.

<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방안>

방안	내용
보조금 지원예산 증액 추진	○ 기업·지자체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'11년 기업이전 및 고용 보조금 예산 증액 을 추진키로 함('10년도 예산 1,106억원) - 지방공장 신설 추가 지원 및 특화분야 등 에 대한 내년도 약 2,000억원의 보조금 지 원 수요 예상
지원대상에 지방공장 신설기업 추가	○ 기존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, 지방소재 신규 투자기업 이외에 추가로 지방공장 신설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'지방투자촉진 보조금(가칭)'으로 확대 개편
지역특화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	○ 시설투자·고용 등에 대한 지원 및 대규모 고용창출 기업, 낙후지역 투자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확대 ○ 지역특화발전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을 우선 지원

□ 과제 2 :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

- 지난해 권역별 시·도간 합의를 거쳐 **12개 선도산업·20개 프로젝트**를 **확정**하고 총 242개 세부 R&D과제* 선정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 추진중('09~'11년간 총 9천억원 투자, 금년도 3,295억원)
- 총 242개 과제, 630개 기관 참여(대기업 11%, 중소기업 77%, 대학·연구소 12%)
- 그러나, **선도산업에 대한 R&D 지원 이외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이 없어**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음.
- 이번 대책에서는 **금융·입지·외국인투자지원 등 선도산업 육성을**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 고용창출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.

<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방안>

방안	내용
선도산업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	○ 신성장동력펀드와 지방기업투자전용펀드의 광역경제권 단위 활용 을 추진 ○ 현금지원운영 요령(지경부고시) 개정 및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우선적 지원 ○ 선도산업 연관 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 하여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
선도산업의 고용창출 기반 강화	○ 선도산업 기업이 인재양성센터 4학년생을 1년간 장기인턴 으로 선발하고, 직원 채용 시 R&D 사업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 으로 지원 - 연간 100억원 규모로 약 500명의 예비 고급 인력 추가 고용 가능 ○ ' 선도산업 인력개발 협의체 '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, R&D 기획 단계부터 기업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전략을 수립

□ 과제 3 : 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

- **산업단지**는 제조업 생산의 60%, 수출의 72%, 고용의 40% 담당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 역할을 담당함.
- '09년말 전국에 815개 산업단지 지정(국가 40, 일반 368, 도시첨단 6, 농공 401)
- 그러나, 20년 이상 **노후화**된 산업단지가 증가하고,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**입지공급이 미흡**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됨.

<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>

방안	내용
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	○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개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,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
녹색·지식산업 입주 확대	○ 민간이 산업단지 내 지자체·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○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력 제고
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	○ 금년부터 최초로 노사관계·공장설립지원 등 '입지만족도'를 매년 조사·공표하여 지자체의 입지행정 서비스 경쟁 유도 ○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선도산업, 도시형 산업의 입지패턴 변화 및 수요를 전국적으로 조사, 이를 토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입지정책 수립 ○ 휴·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대규모 필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제한 완화로 소규모 입지 수요를 충족

□ 과제 4 : 시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

- 지난 10년간 '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'(시·도별 4개 산업)에 총 3조 7,437억원을 투입하여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기업혁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,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함.
- 향후 S/W형 지원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, 단계적으로 지역 주도로 특화된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.

<시·도 전략산업의 단계적 개편(안)>

구분	'99~'09	'10~'11	'12이후
단계	기반구축	1단계 개편 (전환기)	2단계 개편 (성숙·고도화)
중점방향	지역산업발전 인프라 구축	지역 자율성 확대	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특화 발전
기획·평가	중앙 주도	중앙+지역 공동	지역 주도 (중앙권한 최소화)
주요성과	H/W 위주, S/W 지원	H/W 최소화, S/W 확대	S/W 중심

□ 과제 5 :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

- '05년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1·2단계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능을 확충하고, R&D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'연구+산업'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중임.
- 산업기능 보장 등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, 선도기업 창출 미흡, 낮은 기술사업화율 등으로 당초 기대치에는 미흡

<대덕특구의 주요 성과>

구분	입주기관수	매출액	연구개발비	기술이전
2008년	1,059	11.2조 원	4.8조 원	974건
'05년대비 증감	42.7%	338.3%	235.8%	59.4%

주: 특구내 입주기업 중 거래소 상장기업은 3.8%에 불과

- 향후 대덕특구를 국가 R&D 허브로 지속 강화하는 한편, 광역경제권 내 경제거점을 추가특구로 지정하여 R&D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.

<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안>

방안	내용
대덕 특구의 국가 R&D 허브로 기능 강화	○ 대덕특구 내 고급기술 활용방안, 기술사업화 촉진, 특구 외 지역으로의 성과 확산 등 대덕특구의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 ○ 세종시·과학비즈니스 벨트 등과의 연계·협력력을 강화하여 R&D 성과의 파급효과를 제고
광주·대구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추진	○ 광주·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함으로써, 광역경제권내 R&D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, 국가 R&D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. ○ 민간 전문가 자문단, 추가지정 TF 구성 등을 통해 '10년 중 특구 동시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

동향 100426-02

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개편안

※ 4.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사업연망

1) 추진배경

- 기존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 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
-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농산업 육성하고 **생산위주의 농업을 1·2·3차 산업과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**방안 모색
-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지방농정 활성화 필요

2) 사업목적

-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**전략품목 육성**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·학·연·관의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
- 농어촌지역에 있는 유·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·개발하고 1·2·3차 산업으로 연계·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
- 지역 농산업 주체들간 네트워크에 의한 가용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해 **농업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** 및 농가소득 증대

3) 지원근거

- 국가균형특별법 제16조(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)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, 제16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), 제51조(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)

4) 사업내용

항목	내용
사업기간	○ 2005년~(계속) - 시범사업('05년~) : 20개소 - 본사업('08년~) : 22 개소 - 광역사업('09~) : 12개소
사업기간 및 선정시기	○ 기본 3년(평가후 1-2년 추가지원)/격년제
지원형태	○ 지자체보조
지원조건	○ 국고 50%, 지방비 50%
사업시행주체	○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단

□ 사업추진 성과

- 산·학·연의 상품화 기술개발 등에 공동 참여로 **투자액 대비 4배** 수준의 농기업체 및 생산자의 매출액 증대
 - '05년부터 '09년까지 52개 사업단에 총 1,03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이전보다 매출액이 3,782억원 (4배) 수준 증가
- 생산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**농산업과 지역의 문화·관광산업을 연계** 하는 계기 마련

<클러스터사업단 참여 농기업체 매출액 조사결과>

구분	'05	'06	'07	'08	'09(B)	B-A
'05선정사업단	5,720(A)	6,389	7,026	7,645	8,295	2,575
'08선정사업단				4,105(A)	5,312	1,207

□ 사업추진 사례

<사업추진 사례>

추진사례	내용
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단	○ 포도산업을 가공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먹는 포도(1차산업)에서 마시는 포도(2차), 즐기는 포도(3차) 산업으로 성장
보성녹차클러스터사업단	○ 기존 녹차에서 벗어나 캔 음료, 장류제품, 국수류, 과자 및 아이스크림류 등 가공식품으로 상품 확대 ○ 녹차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사업과 녹차체험관광, 다기세트 관련 산업과 연계
무주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	○ 선풍식품과 MOU를 체결, 머루식초(마시는 흑초) 개발 원료(140톤) 납품, 머루관련 기업 4개소를 유치하여 농가소득 및 머루 가공품 매출액 증대
풍기인삼 클러스터사업단	○ 지역대학(동양대)을 중심으로 인삼농가(880호), 가공업체(89개), 유통업체(221개), 인삼시험장, 대학, 영주시가 협력체계를 구축
안성마춤 클러스터사업단	○ 농가지원 및 생산기반정비 등 타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공동마케팅 및 지역브랜드 활성화
영암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	○ 공동선과, 공동출하를 6.7배 확대 및 가공산업과 연계한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3건, 상표등록 2건 및 지리적표시 등록과 재배매뉴얼 개발, 선별기준 확립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

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주요 개편내용

- 기존에는 농수산물의 단순 생산·유통 중심의 사업이었으나 앞으로는 **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중심축을 전환**, 지역의 전략적 발전계획 하에 식품기업 등이 참여하여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

- 건축물 등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부지확보(부지사용 승락서), 토지의 용도변경 등 확인을 거쳐 당해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임.
- 연구개발 사업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보다는 사업기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과 상용화할 참여 식품기업과 직접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임.

□ 사업 시행 절차

- 2011년 사업단을 금년 중 선정, 3~4개월 동안 내년도 사업준비 시행
-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·학·연·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의 선발과정을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(7월 8일까지)
- 지자체별 사업계획은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합성,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평가단의 3단계 평가(서면, 현장, 공개발표)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단 12개소를 선정
- 선정된 후보 사업단(12개소)중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 준비상황 확인과정을 통해 10개 사업단을 최종 선정
-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2011년부터 3년간 50억원을 지원받고 3년 뒤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지원을 받게됨.

동향 100426-03

일조량부족 시설작물 피해농가 최초 지원

※ 4.20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일조량부족 시설작물 피해농가에 최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재해 최초 인정, 총 3,467억 원 지원 결정

- 4월 1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
-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총 3,467억 원 지원 결정

□ 피해규모 및 복구지원 세부 내역

1) 피해 원인

- 금번 겨울철('09년 12월~'10년 3월) 일조량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20%가 부족했음. 특히, 시설작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2월말~3월초에는 40%나 부족하여 시설작물에 착과(着果)불량, 병해충 발생, 고사 등 많은 피해를 입혔음.

2) 피해규모

- 3.25~4.16일까지 실시된 시·군의 일조량 부족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설재배면적 5만1천여ha 중 28%인 1만4천여ha 피해
- 지역별로는 경북이 469ha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경남, 충남, 전남, 대구, 전북, 부산, 광주, 대전, 충북 순임.
 - 경북 4,669ha, 경남 3,614ha, 충남 2,042ha, 전남 1,611ha, 대구 576ha, 전북 496ha, 부산 459ha, 광주 439ha, 대전 111ha, 충북 88ha, 강원 26ha, 경기 10ha, 울산 9ha, 인천 2ha

○ 피해지역이 시군별 50ha 미만이어서 자체 재원으로만 복구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역은 강원, 경기, 울산, 인천 지역임.

○ 품목별 피해면적은 **채소 12,594ha, 화훼 349ha, 과수 67ha**, 고추 등 기타품목이 1,095ha임.

<작목별 피해규모>

단위 : ha

구분	피해면적	피해율		
		~30%	30~50%	50%~
계	14,105	594	4,128	9,383
채소	12,594	259	3,278	9,057
과수	67	2	51	14
화훼	349	50	282	17
기타	1,095	283	517	295

3) 재해복구비

○ 재해복구비를 항목별로 보면 대파대는 64억 원(보조 50, 용자 14), 농약대(보조)는 42억 원, 생계지원비(보조)는 156억 원,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금액(보조)은 3천만 원임.

<항목별 복구소요액>

항목	구분	복구비용 (백만 원)	보조			용자	자담
			소계	국비	지방비		
총계		29,068	24,823	17,375	7,448	1,443	2,803
농약대	10,296ha	4,202	4,202	2,941	1,261	-	-
대파대	2,335ha	9,197	4,952	3,466	1,486	1,443	2,803
생계지원	18,718농가	15,638	15,638	10,946	4,692	-	-
高敎학자금면제	576농가	31	31	22	9	-	-

○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천만 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**농축산경영자금 용자액 1,305억 원도 1~2년 상환을 연기하고, 해당 이자(약 58억 원)를 감면**

- 1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30~50% 피해농가 3,528호) : 38,618백만 원

-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50%이상 피해농가 10,132호) : 91,971백만 원

<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>

단위 : 백만 원

구분	농가수	용자액	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기간
계	13,660	130,589	
30~50% 피해	3,528	38,618	1년
50%이상 피해	10,132	91,971	2년

○ 단위면적당 조수입규모가 큰 **시설농업**의 특성상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복구비만으로는 시설농가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**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용자 지원**

○ 농어업재해대책은 대파대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지만 **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피해액에 비하면 지원수준이 낮음.**

- 시설수박의 경우를 보면 경영비와 조수입이 각각 1ha기준으로 17,372천 원, 42,878천 원이나 재해로 인한 대파대는 1,960천 원에 불과함.

○ 재해대책경영비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고, 대출 조건은 **연리 3%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함.** 농가당 재해대책경영비 용자지원규모는 피해면적 1ha이내에서 품목별 경영비의 70%까지임.